

KERI Brief

민간소비 부진 현황과 시사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2006~2013년 사이 가계의 근로소득은 32.6%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대를 견인하였으나 사업소득은 19.2%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소득증가 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이 부진한 원인은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연금 등 미래를 대비하는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한 기타지출도 크게 증가한 까닭이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만 증대시키는 것으로 소비지출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금주도형 경제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대책으로 판단된다.

강제로 임금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 오히려 고소득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상이 국내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소비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내수 진작을 위한 효율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1. 검토 배경

□ 소매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그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는 평균 소비성향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소매판매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볼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수준

- 소매판매 증가율 3년 이동평균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2014년 소매판매 증가율은 1997년 아시아 금융·경제 위기,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제일 낮은 수준
- 특히, 2013~2014년의 경우 급격한 경제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증가율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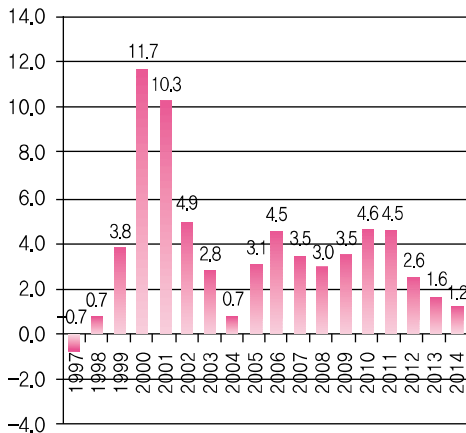
- 2005~2014년 실질 소매판매 증가율과 평균소비성향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소비성향 위축으로 소매판매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실질 소매판매 증가율의 평균소비성향과의 상관계수는 0.73이며 평균소비성향 1년 선행치와의 상관계수도 0.64
- 반면, 평균소비성향 1년 후행치와의 상관계수는 0.16에 불과해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실질 소매판매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판단

[그림 1] 실질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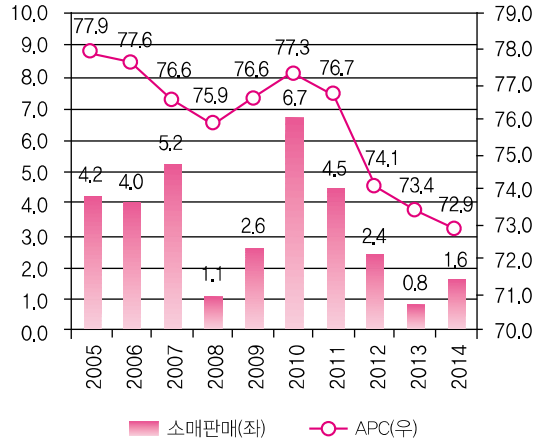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DB

주: 소매판매 증가율 3년 이동 평균

실질소매판매 증가율 및 평균소비성향

(단위: 좌 - 전년대비%, 우 - %)



자료: 통계청 DB,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민간소비 부진 이유를 파악하여 내수 진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근 정부는 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로 내수 확대를 추진

- 최근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증대할 경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

-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이 부진한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내수 진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 가계소득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가계소득 증대가 부진한 이유를 찾고자 함.
- 또한, 가계의 지출 구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가 소득 증대보다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함.

2. 가계의 소득 및 지출 변화 추이

□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2006~2013년 사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19.2%에 불과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을 포함한 가계소득은 30.6% 증가에 그침.

-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06~2013년 사이 가계의 경상소득은 31.6%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가(30.6%)를 견인

-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32.6% 증가하였으나 사업소득은 19.2% 증가에 그쳐 가계소득 증가율의 2/3 수준에 머물.

- 따라서 최근 가계소득의 증가가 부진한 것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이 낮은 것에 기인

- 경상소득 중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율(19.2%)은 재산소득(43.6%) 및 이전소득(52.5%)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

[그림 2] 가계소득 증가율(2006~2013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국민계정을 분석하여도 2000년 이후 가계소득 증가 부진의 주요 원인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대 부진임을 알 수 있음.

- 2001~2014년 사이 가계소득은 연평균 5.6% 증가했으며 대부분은 임금소득 증가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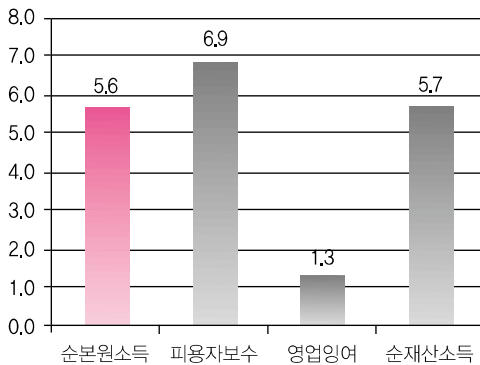
- 국민계정상 가계소득(순분원소득)을 임금소득(피용자보수), 자영업 영업이익(영업잉여) 및 순재산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가계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임금소득은 연평균 6.9%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
- 반면, 가계소득의 약 18%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영업잉여)은 1.3% 증가하는 데 그쳐 가계소득 증대 부진의 주요 원인
- 한편, 재산소득은 비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나 연평균 5.7% 증가

- 2000년 이후 가계소득 증대가 부진한 것은 임금소득보다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대가 부진한 것에 기인

- 임금소득(피용자보수)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4.1%에서 2014년 75.6%로 11.5% 포인트 상승
- 반면,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저조하여 가계소득에서 영업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4.8%에서 2014년 13.7%로 하락
- 한편, 순재산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1%와 2014년 10.7% 사이에서 안정적인 추세

[그림 3] 가계소득 요인별 연평균 증가율(2001~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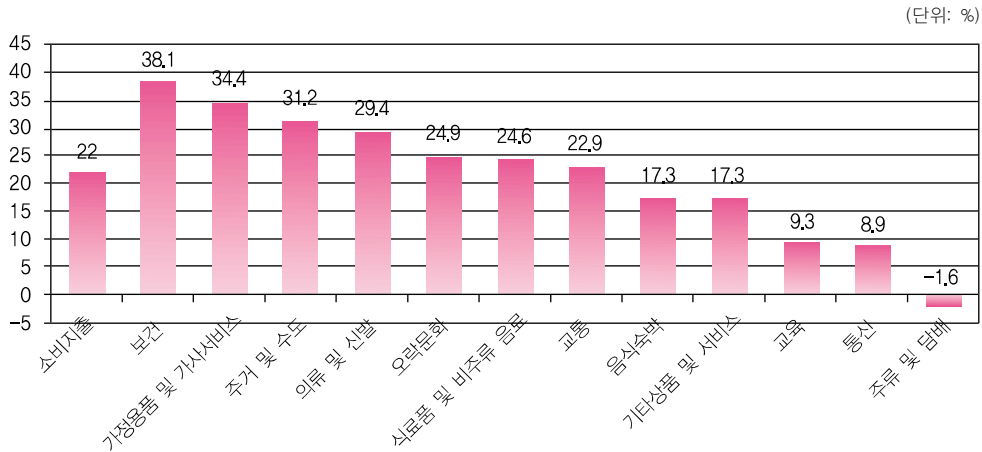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1] 가계소득 구성의 변화

(단위: %)

	2000	2005	2010	2014	2000~2014
피용자보수	64.1	71.5	74.0	75.6	71.6
영업잉여	24.8	19.7	15.5	13.7	18.2
순재산소득	11.1	8.8	10.5	10.7	10.1

[그림 4]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2006~2013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 2006~2013년 사이 경상소득이 31.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은 이보다 크게 낮은 22.0% 증가에 그침

- 2006~2013년 사이 불요불급한 소비지출을 자제함으로써 소비지출은 22.0% 증가에 그침

- 소비지출 증가율이 낮은 부문은 ‘주류 및 담배’(-1.6%), ‘통신’(8.9%), ‘교육’(9.3%) 등
- 소비지출 증가율이 높은 부문은 ‘보건’(38.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34.4%), ‘주거 및 수도 광열’(31.2%) 등

○ 세부 부문 중 증가율이 높은 대표적 부문은 미래를 대비하는 개인 지출 중 하나인 연금보험지출(127.0%)

※ 연금보험지출은 개인연금보험지출을 의미하며 원천징수 되는 연금은 아님.

○ 종합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는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

□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은 비소비지출 및 기타지출 증가로 인해 전체 지출 중 소비 지출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 결과**

- 소비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은 가계 지출 중 비소비 지출 및 기타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에 기인

- 가계의 지출은 크게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기타 지출로 구분([그림 7] 참조)
- 2006~2013년 사이 비소비지출은 36.9%, 기타지출은 47.2% 증가하여 소비지출 증가율(22.0%)을 크게 상회

-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및 사회보장, 연금 관련 지출 증가로 인해 2006~2013년 사이 36.9%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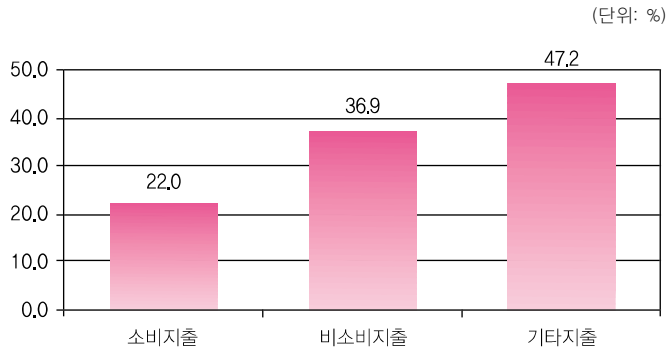
- 비소비지출에는 각종 조세, 연금 및 사회보장 지출(개인연금이라 아니라 원천 징수되는 연금 및 사회보장 지출) 등이 포함되며 2006~2013년 사이 36.9%나 증가
- 특히 사회보장(76.5%), 이자비용(55.1%), 경상조세(44.0%), 연금(40.2%)이 크게 증가

- 한편, 저축 및 부채감소를 위한 기타지출도 소비지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06~2013년 사이 기타지출은 47.2%나 증가
-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저축 및 적금, 펀드, 부동산 구입 등)은 24.7% 증가
- 또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부동산대출 상환, 기타대출 및 전세금 반환)은 같은 기간 79.3%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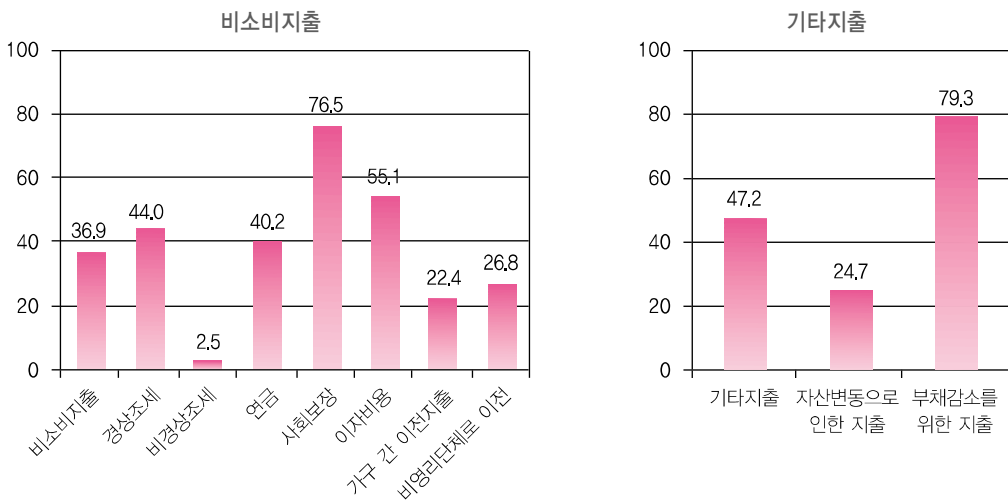
- 따라서, 지난 2006년 이후 가계의 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은 각종 조세, 연금 및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고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

[그림 5]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2006~2013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6] 가계 비소비지출 및 기타지출 증가율(2006~2013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3. 시사점

□ **가계의 소득 증대,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만으로는 민간소비 증대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

- 임금 증대만으로는 가계의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지난 2000년 이후 가계 소득 증가가 부진한 것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가가 부진한 것에 기인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은 소득증가 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접근

- 근로자의 임금 증대를 통해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키더라도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가계의 소비지출이 부진한 원인은 조세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미래를 대비하고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해 비소비지출 및 기타지출이 증가한 까닭
- 따라서 단순히 임금만 증대시키는 것으로 소비지출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상황

-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금주도형 경제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대책으로 부작용만 우려됨.

- ILO에 의하면, 임금주도형 경제성장 체제는 임금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가 임금 증가로 인한 이윤 감소 및 투자 감소의 효과보다 더 클 경우 가능
- 그러나 현재로서는 임금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황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3년 World Bank 자료 기준 53.9%로 일본(16.2%) 및 미국(13.5%)에 비해 상당히 높음.
- 따라서, 임금 증가가 국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진 다 하더라도, 단위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는 상황

[표 2] 소득 5분위별 가계 수지(2014년)

(단위: 천 원, %, %p)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1,461	2,866	3,917	5,137	8,130
소비지출	1,257	2,023	2,532	2,956	3,987
처분가능소득	1,208	2,387	3,241	4,181	6,472
평균소비성향	104.1	84.7	78.1	70.7	61.6
(전년 대비 변화)	(-2.7)	(-1.3)	(1.6)	(-1.1)	(-2.7)
소비지출 비중	9.8	14.9	19.2	23.7	32.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및 가계동향 보도자료

□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면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더 효율적

-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내수 진작에 더 효율적인 방안

- 소득 1분위(하위 20%)는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소비 규모를 감안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소득 1분위의 2014년 평균소비성향은 104.1%이지만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불과
- 따라서 소득 1분위의 소득이 10%나 증가하더라도 전체 소비는 1.02% 증가하는 데 그침
- 오히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5분위 평균소비성향을 5%p만 상승시킨다면 전체 소비는 2.63% 증가
 - ※ 5분위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65.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61.6%에 불과
- 따라서 고소득층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 진작에 효율적인 접근

□ 또한, 국내 소비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내수 진작을 위한 효율적 방안 중 하나

-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인 소비진작 정책

○ 2006~2013년 사이 가계 소비지출은 22.0%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2009~2013년 사이 해외직구는 무려 190.0% 증가

○ 거주자의 해외 카드사용 실적 역시 2007~2014년 사이 91.4% 증가

○ 따라서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입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 도입(병행수입 확대 등)을 통해 수입품의 국내가격과 해외가격 사이 격차 축소를 유도하여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내수 진작에 필요한 정책

[표 3]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 동향

연도	건수(만 건)		금액(억 원)	
	건수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9년	220		911	
2010년	602	(173.3%)	2,082	(128.6%)
2011년	1,066	(77.1%)	3,365	(61.6%)
2012년	1,535	(44.0%)	4,881	(45.1%)
2013년	2,165	(41.0%)	5,881	(20.5%)
2014년 상	1,474	(21.7%)	4,019	(57.1%)
2009~2013		(570.0%)		(190.0%)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15.2.13.)

주: ()는 전년(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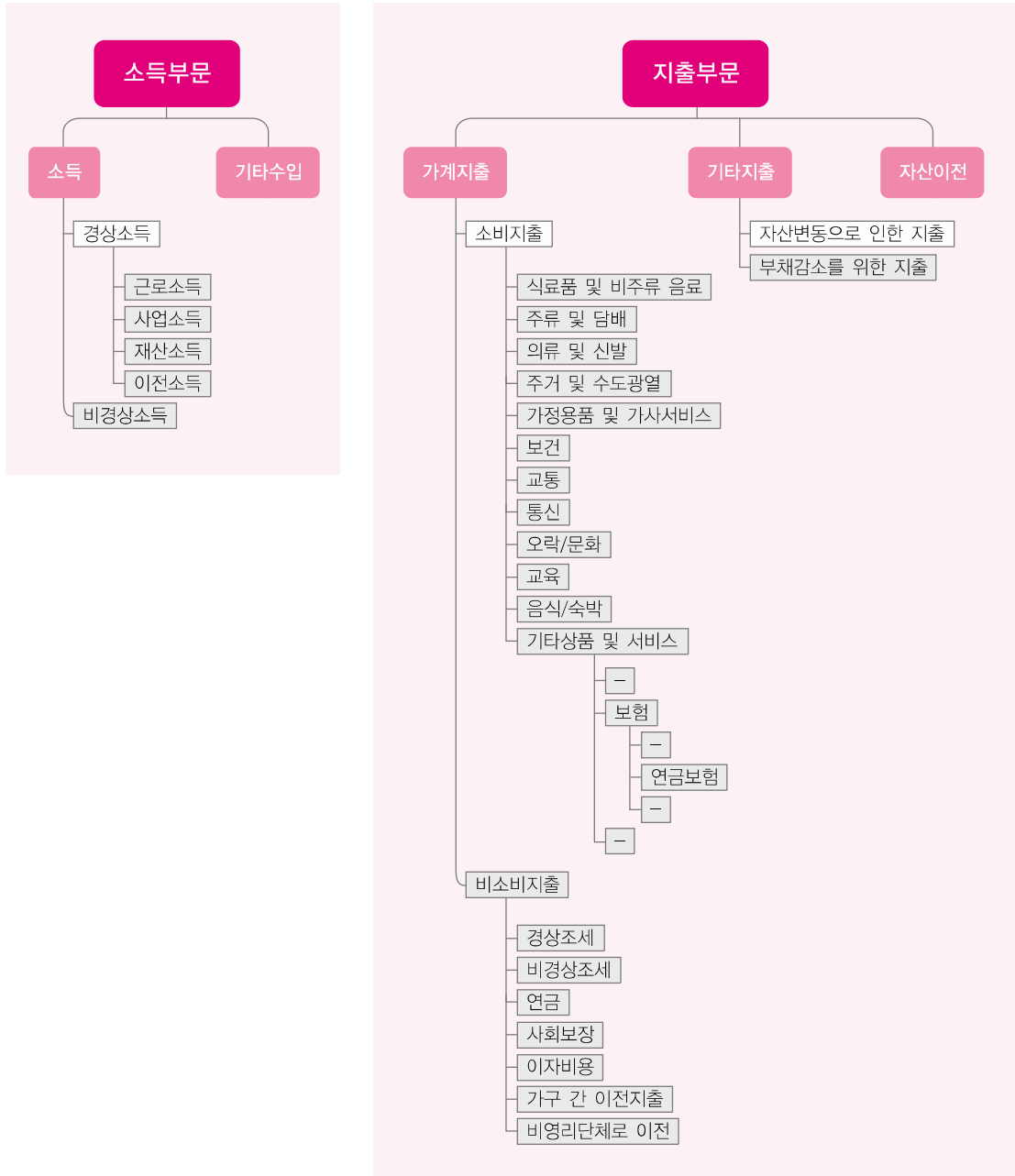
[표 4]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구분	거주자의 해외 사용실적					
	사용금액(백만 달러)		사용카드수(천 장)		장당 사용금액(달러)	
2007	6,373	(32.5)	8,866	(25.7)	719	(5.5)
2008	6,796	(6.6)	9,371	(5.7)	725	(0.9)
2009	5,379	(-20.9)	8,439	(-9.9)	637	(-12.1)
2010	7,272	(35.2)	12,795	(51.6)	568	(-10.8)
2011	8,619	(18.5)	17,368	(35.7)	496	(-12.7)
2012	9,436	(9.5)	20,348	(17.2)	464	(-6.6)
2013	10,546	(11.8)	24,318	(19.5)	434	(-6.5)
2014	12,201	(15.7)	30,008	(23.4)	407	(-6.3)
2007~2014		(91.4%)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15.3.3.)

주: 1) 여행자가드는 제외 2) ()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그림 7] 가계의 소득 및 지출 구성



자료: 가계동향조사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5년 5월 29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